

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이재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86
----------	------

발의 연월일 : 2017. 11. 8.
발 의 의 원 : 이재화 의원
김의식 의원
도재준 의원
배창규 의원
이경애 의원
임인환 의원
장상수 의원
최옥자 의원

1. 제안이유

일·가정 양립정책을 반영하여 일·가정 양립 생활문화의 정착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나.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(안 제2조)
다.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라.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마. 일·가정 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나. 관계법령 : 붙임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·가정 양립 생활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”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가족이 살기 좋은 제도와 사회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.
2. “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”란 일상적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사회가 보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인정하는 생활문화를 말한다.
3. “가족친화제도”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.
 - 가. 유연 근무제도 :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, 시간제 근무, 집약근무제 등
 - 나. 자녀의 출산·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: 배우자 출산휴가제, 육아휴직제, 직장보육 지원,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
 - 다. 부양가족지원제도 : 가족 돌봄 서비스, 가족간호휴직제 등
 - 라. 근로자 지원제도 : 근로자 건강·교육·상담프로그램 등
 - 마. 가족관계 증진제도 : 가족사랑의 날, 가족 초청행사, 정시 퇴근제, 가족 직장체험, 가족단위 문화체험 등 운영 지원
 - 바.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: 취약계층 가족지원제도
4. “가족친화기업”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 경영기업이며 정부의 평가를 통하여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.
5. “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”이란 노인 및 아동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주민 스스로 추진하여 가족이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춘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·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의 도입·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(이하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
4. 그 밖에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사업) 시장은 일·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
2.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
3.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 확산 사업
4.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및 연구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

제9조(가족친화기업 지원)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시 우대
2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0조(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일·가정 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가정양립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
 2.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
 3.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
 4. 가족친화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
 5.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, 조사 및 홍보
 6. 일·가정 양립 추진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
 7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지정기간,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1.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이바지한 사람
2. 일·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가족친화법)】

[시행 2017.6.21.] [법률 제1443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(가족정책과) 02-2100-6328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1. "가족친화 사회환경"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,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.
2. "가족친화 직장환경"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.
3. "가족친화제도"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.
 - 가. 탄력적 근무제도 :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
 - 나. 자녀의 출산·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: 배우자 출산휴가제, 육아휴직제, 직장보육 지원,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
 - 다. 부양가족 지원제도 : 부모 돌봄 서비스, 가족간호휴직제 등
 - 라. 근로자 지원제도 : 근로자 건강·교육·상담프로그램 등
 - 마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
4. "가족친화 마을환경"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·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2.2.1.>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2.2.1.>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2.2.1.>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

제9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)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1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
2.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
3.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
4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

제15조(가족친화기업 등 인증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·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5.3.27.>

제19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2.2.1.>

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9.15>

1.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2.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
3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4.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
5.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, 조사 및 홍보
- 5의2.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
6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2.2.1.>

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지정기간,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남녀고용평등법)】

[시행 2016.1.28.] [법률 제13932호, 2016.1.28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여성고용정책과) 044-202-7471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.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,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·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7.12.21.]